

통합명칭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합의

동부·무안·광주청사 3곳 균형있게 운영
“주 사무소 통합시장 권한” 갈등 불씨 남아
오늘 특별법 발의...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자치단체 이름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2·5·8·9·19면
논란이 일었던 전남광주특별시의 청사는 전남도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통합특별법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뜻을 모았다.

지난해 말 행정통합론이 첫 제기된 후 한 달 만, 지난 2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을 공식 선언한 지 25일 만이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날 7시 30분부터 마라톤 회의를 진행해 12시 30분께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 시장과 김 지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은.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공동 브리핑에서 “지난 일요일(25일) 가안으로 마련됐던 내용을 폐기하고,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대응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의 청사는 특정한 위치를 정하기보다는 통합 정신을 살려서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원들과 시도지사는 지난 3차 회의(25일)에서 ‘통합시의 주 사무소를 전남에 둔다’라는 가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주 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의 결실들이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 통합 특별시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많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대통합의 정신을 높이 살려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애초 예상보다 길어져 4시간 가까이 진행하면서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큰 소리가 나오는 등 한때 갈등을 노출했다.

의원회관 306호실을 빌려 회의를 하다가 9시 30분을 넘어서자 회의장을 같은 층에 있는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 사무실로 옮겨 진행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의원들은 각각 지역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를 마치고 특별시 명칭과 주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주장들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이 통 큰 집중 지원을 놓쳐서 정말로 소탐대실 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하고 다시 논의해서 통합 정신을 살려 가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제 명칭과 청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좀 더 속도를 붙여서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광주와 전남이

원하는 그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행정자치단체 통합 특별법안은 28일 민주당 광역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에서 공식 발의된다.

300여 개 조문에 400개 가까운 각종 특별법을 담은 이 특별법안은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이후 국회 행

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와 민주당 입법지원단 논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부남 광주시장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 충분한 숙의를 거치는 한편 도중에 시나 도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거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다음

달 3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오는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김치·보성다향·영암왕인축제 ‘문화관광축제’ 지정

추억의 총장·담양대나무·함평나비·장흥물축제 ‘명에 문화관광축제’ 포함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축제인 광주김치축제와 보성다향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가 ‘2026~2027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돼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광주김치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고,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명에 문화관광축제’로 이름을 올

렸다.

전남에서는 보성다향대축제와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고, 담양대나무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함평나비축제는 ‘명에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됐다.

문화관광축제는 최근 2년간 전문가·소비자·지역주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요소 발생 여부와

관광객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47개 (명에 20개 포함)가 선정됐다.

광주김치축제는 김치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전시·미식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해왔으며,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도심 골목을 무대로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전남지역에서는 보성다향대축제가 차 문화와 녹차 산업을 연계한 콘텐츠로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담양대나무축제와 함평나비축제 등은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대표 축제로 꾸준한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축제 별로 국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제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등도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을 계기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l235@gwangnam.co.kr

설 연휴 성수품 최대 50% 할인·통행료 면제

설자금 39조3000억 신규 공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게 지원하고, 5일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 자금 39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명절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고, 계란은 신선란 224만개를 설 전에 수입해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은누리상품권 현금 행사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시장에 적용토록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160개 시장에서 200개로 수산물 12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설 연휴 기간 면제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